



2006. 4. 21.

식품산업 발전 정책동향

내용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 식품산업 발전 정책동향

○ 현황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생산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약 35조 4,000억원으로서 세계시장 2조8,500억불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2002년 수입실적은 30.8억불인 반면, 수출실적은 18.8억불로서 12억불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도 2003년의 국내 음식료품 R&D투자 비율은 제조업 전체 투자비의 1.68% 수준이었으며, 정부의 식품 관련 R&D 지원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고, 산업경쟁력부분도 인건비, 물류비 등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악화된 상태라 할 수 있음.

○ 문제점

- 우리나라 식품산업 제품은 원료비, 광고비, 물류비가 높아 타 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으며, 국산 원료의 생산 부족 및 가공식품 주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 부족에 따른 기술경쟁력 열세,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 부재 그리고 수출입제도 관련 정보 부족 및 세계화 전략 부재를 들 수 있음.

○ 발전전략의 기본 방향

-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으로서 식품 공전중 품질 규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병원성미생물·중금속 등의 위생규격 중심으로 관리함.
- 전략분야를 집중지원하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을 집중지원 함.
-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주요 수출국의 제도조사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함.

○ 발전전략별 추진계획

·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식품공전 개정

- 안전성과 무관한 품질규격은 식품공전에서 폐지·완화하고, 중금속·병원성 미생물 등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을 전면개정하며, 식품공전상의 기준·규격을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 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식품공전 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주기적·지속적인 기준·규격의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민원질의가 많은 식품공전에 수록되지 않은 다양한 식품원료의 식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의 인정절차 및 평가방법을 제정·고시토록 함.

· HACCP 제도 의무화에 따른 지원확대

- HACCP 적용 의무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07년 의무적용 대상 식품에 대한 HACCP 적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며, HACCP 적용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HACCP 기술적용을 위한 컨설팅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함. 지원금 규모는 2004년 2억원에서 2005년에는 4억원으로 확대 함.
-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현 실정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식품안전생산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은 위해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위생관리가 시급한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우수위생지침(Good Hygienic Practice: GHP) 모델을 개발하여 배포함.

· 효율적인 식품정보 전달체계 구축

- 식품과 관련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전달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정하며,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전달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또한 위해평가 분야, 각 식품군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 Pool을 구성하며, 식품의 안전사건 발생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위해 대책 및 평가 전담반을 운영하여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식품위생사건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

- 그리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식약청, 산업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해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기적인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공익광고 형태의 시청각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

· 식품관련법령 체계 개선

- 식품산업의 발전은 안전한 식품의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비자 안전 중심의 범 부처적 법안인 가칭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함.
- 또한 위해분석(Risk Analysis)을 통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하며, 산업체의 영업자율성 보장, 기술개발지원 등 식품산업진흥방안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검토함.

·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선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담당공무원과 식품안전 및 영양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식품진흥기금 운용협의회』를 운영하여 식품연구 및 교육 등 식품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기금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지자체간 또는 중앙정부·지자체간의 수직·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또한 기금 운영 담당자 또는 부서의 기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

· 식품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관세청, 관련 협회 등을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세율 조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며, 원료수급문제,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역관세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함.

- 또한 관세율 조정 및 수입선 다변화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 조정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농가이익 및 보호방안을 제시함. 대두 등 국내 생산량이 저조하며, 농가보호에 직접 관련이 없는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방안 검토 및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함.

○ 고부가가치식품(주력품목)의 육성·지원

· 기능성 신소재·신제품 개발 지원 확대

- 건강기능식품 신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업계의 요구가 많은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신소재·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자금의 지원 확대 및 건강기능 신제품의 식약청 인정절차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또한 기능성 원료의 품질 표준화를 위해 원료의 기능·지표성분 및 표준함량 규격을 설정하며, 원활한 원료공급 및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 기능·지표성분의 표준분석방법을 확립함.
- 그리고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능성 소재·생약소재·관련 학술정보 등 국가 R&D성과를 DB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능성 신소재의 발굴을 지원함.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GMP 도입 지원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GM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은 6개 제형별 GMP적용 메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음으로 32개 품목별 GMP 적용메뉴얼을 개발함.
- 또한 GMP에 대한 올바른 업체의 인식 제고를 위해 포스터, 표어, 리플릿, 만화 등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며, GMP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을 제시하고, GMP 제도운영에 관한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업체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함.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인식 개선

-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건강기능식품법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과학적 기능성 평가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
-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이해 확산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선택방법 및 기능성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예건강기능식품감시원,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소비자 위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세계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 성장유망식품의 CODEX 국제기준 설정

- 국내·외 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해외 틈새시장 돌파가 가능한 유망전략 품목의 선정기준을 설정하며, 중요 CODEX 분과위원회별(식품표시분과(CCFL),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CCFAC) 등) 지정 전문가의 지속적인 회의 참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적극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위원회(예, 아시아분과위원회), CCFAC 등 국익에 필요한 CODEX 분과위원회를 적극 유치하도록 함.
- 그리고 국가 CODEX 전문가 양성 및 식약관 파견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CODEX 분과위원회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CODEX 기준·규격 설정 추진 시,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등 산·학·연의 Brain Pool을 활용하며, CODEX, FAO, WHO, OECD 등 국제기구에 보건복지부, 식약청의 관련 공무원의 파견을 확대하고 활동을 강화함.